

데스크 시각

정기태



미국의 '타임'지는 지난 1995년 '서비스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일본 MK 택시를 선정했다. 1960년 단 열 대로 시작해 일본 최대의 택시회사로 성장한 MK,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회사의 회장이 경남 남해 출신 유봉식이라는 점이었다.

국내외에 술하게 소개되고 벤치마킹 된 MK 택시의 서비스는 장애인 우선승차제도·구급택시·영어회화택시·관광택시·달리는 정보백화점·특수학교 스쿨버스·택배 서비스·GPS 콜시스템 등등... 경영의 출발점이 고객 지향적이라는 점이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이다. 이런 '고객 만족 실현'은 친절과 서비스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고객 만족 서비스 기대 못해

세삼 오래된 MK 이야기를 다시 꺼내든 것은 광주시내를 달리는 택시의 불친절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렇다간 전국 체전 기간 중 광주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각인될 거라는 걱정도 크다.

최근 필자가 직접 겪었던 사례 몇 가지. 퇴근길 차진 물에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무슨 '뽕짝' 소리가 요란했다. "기사 아저씨, 소리 좀 끄시다" "아니, 난 듣기 좋은데 왜 그러요? 참 이상한 양반이네." 운전

최근 필자가 직접 겪었던 사례 몇 가지. 퇴근길 차진 물에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무슨 '뽕짝' 소리가 요란했다. "기사 아저씨, 소리 좀 끄시다" "아니, 난 듣기 좋은데 왜 그러요? 참 이상한 양반이네." 운전

광주 택시, 소리 좀 끄시다

사는 목적지에 갈 때까지 불투명 요금 줄였을 뿐, 소리를 끄지 않았다.

지난 9월 초엔 이런 일도 있었다. 택시에 설치된 TV로 드라마를 보고 있던 기사에게 "17세 이하 청소년층구 중계방송 좀 틀시다"고 말하자 대뜸 통명스럽게 되돌아오던 말. "나는 죽구 싫어해라" 집에 돌아와던 중 축구를 볼 수 없었음은 물론, 관심없는 연속극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했다. 할 때부터 내릴 때까지, 자신의 가정 문제를 넋두리한 기사도 있었다.

남자 승객도 이렇진대, 여자 승객들은 어떻게? 대부분 '무서워서' 깃소리도 못

하고 라디오·오디오·휴대전화·TV 소음을 고스란히 참는다고 하소연이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광주일보 사회부 기자들이 직접 택시를 타며 소음을 측정했다. 놀랍게도 금남로를 지나는 광주 택시 내의 소음은 평균 76dB이나 됐다. 사람들의 대화(60dB) 수준을 넘어서 전화벨(70dB)보다 심하고, 지하철 차내 소음(80dB)과 비슷하다는 수치였다.

우리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감독관청인 광주시에서 수차례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택시, 소리 좀 끄시다"라는 캐치프

레이드로 친절운동을 펼치자는 제안도 했다. 현대 아직 메아리가 없다. 택시운송사 업조합 측도 "회사별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소음 관련 교육을 더욱 늘리겠다"라는 공허한 대답뿐이다.

택시는 한 도시의 친절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광주에는 개인 4천800대, 법인 3천500대 등 8천여 대가 넘는 택시가 운행 중이다. 이들 택시 한 대 한 대가 서비스의 전도사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거기에 있다.

다시 MK 택시로 되돌아가자. MK의 승

객은 운전기사로부터 네 번의 인사를 받지 못하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XXX 기사가 모시겠습니다", "행선지는 ○○○가 맞습니까?", "잊으신 물건은 없으십니까?"가 그것이다.

이젠 행정이 나서라

손님이 탑승하기 전엔 라디오나 오디오를 켜놓지 않는다. 승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원하는 음악이나 뉴스를 틀어준다. 그게 광주 택시와 확연히 차별되는 대목이다. 체질을 바꾸고 광주엔 전국에서 수많은 손님이 찾아온다. 그들은 광주에 대한 첫 인상을 택시에서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 광주체전'의 부대조건으로서 택시 서비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울한 이야기지만,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것 같다.

MK를 변화시킨 것은 경영자의 철학이었다. 거액을 들여, 운전사들의 보장까지 유명 디자이너에게 맡긴 유희식 회장의 마인드가 오늘의 MK 택시를 만들었다.

하지만 광주 택시 경영자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 이제 행정이 나서야 한다. "택시 내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박광태 시장이 공언해야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인가?

<사회부장> meonsan@kwangju.co.kr

시설

여수엑스포유치추 부동표 공략 기대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여수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170여명의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을 비롯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다. 개최지를 결정하는 BIE 총회를 70여일 앞두고 부동표 잡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지구 온난화와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다.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는 모로코 탕헤르 및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제휴양도시인 탕헤르의 추격을 이겨내야 한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및 이슬람권 최초의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내

세워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세계박람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수는 한 표가 아쉬운 입장이다. 정부도 BIE 회원국을 상대로 총력 외교전을 펴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후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지서를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11월 27일 개최지 결정 투표는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도 국제행사 유치전에서 개최능력보다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있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유치위원회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부동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정부도 남은 기간의 유치활동이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략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엑스포 유치에 두번의 실패는 없어야 한다.

광주·전남 마약 청정지역 안심할 수 없다

'물 필요론'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인 GHB를 제조, 판매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0일 GHB를 제조·판매한 일당 2명과 이를 구매해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GHB 제조방법을 알아낸 뒤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제조한 GHB를 다시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판매해 왔다고 한다.

이번 인터넷 신종 마약조직 적발은 광주·전남지역도 마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마약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명에 비해 61.2%가 증가했다. 그동안 마약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최근 마약사범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

화돼 단속이 어려워 있다. GHB 일당도 국내에서 IP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프록시 서버와 인터넷 가상 IP, 금융 연결계좌를 이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제조와 거래는 일반인도 죄의식 없이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더욱이 GHB는 일반인이 구별하기 쉽지 않고 성범죄용으로 악용돼 자칫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마약은 인류 공동의 적이다. 개인은 물론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와 나라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마약 안전지대로 손꼽혀 왔지만 마약사범의 급증에서 보듯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마약 침투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마약사범은 경찰이나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 마약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無等鼓

흡연에 대한 폐해가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좀체 담배를 끊지 못하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 등 신규 흡연자는 늘어난다. 흡연의 좋은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폐해가 훨씬 크다. 가장 큰 폐해는 질병 유발. 담배 속에는 니트로사민, 페놀 등 수십 종의 발암 유발원인자를 비롯 무려 4천여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최근들어 검출방법이 개선되면서 포함된 화학물질의 수도 점점 더 많이 알려지는 추세다.

흡연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니코틴이다. 니코틴은 중독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니코틴 중독증으로 분류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다.

흡연이 부른 질병은 심장관상 동맥질환, 말초혈관 폐쇄질환, 뇌혈관 질환,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구강질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폐암은 조기 발견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서워, 그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가. 최근 세계폐암학회가 각국 정부에 담배의 제조·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해 눈길을 끈다. 폐암 전문가들이 치명적 질환의 예방을 위해 선언문에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청소년 금연교육 등 간접적인 규제로는 도저히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5년 채택된 선언문(공공장소에서 금연, 청소년 등에 대한 금연 교육, 담배소비세 인상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값을 상당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등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봐야 하지 않을까.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담배 규제법

기고

한병선



동국대 신장아, 단국대 김옥랑, 영화 감독 심형래, 배우 윤석화, 지광 스님 등등.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학력을 위조한 사람들이다. 공복점진도 또 있다. 교수, 배우, 종교인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공인(公人)들이란 점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

그때, 그럴 수 있다. 왜냐, 우리사회는 학력사회, 학벌사회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직군(職群)의 사람들이 있다. 다 간과할 수

할 뿐이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고 실력이다.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한 과정이나 자격은 중요치 않다. 오직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족하다. 대중들은 그것을 원한다.

하지만 교수들은 경우가 다르다. 이들은 기능적인 것과 달리 연구하고 가르친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신의 학문적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바탕위에서 새로운 연구나 학문적 성과가 축적된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능력을 검증받는다. 그 결과가 최종 학위인 박사학위이다. 이런 점에서 박사학위

학력위조 교수들은 교단 떠나야

어도 이 경우는 간과하기 어렵다. 학력위조 교수들이다.

첫째, 정직성 문제다. 이들은 가르치는 신분으로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교사든, 교수든 가르치는 사람들의 기본 자질은 정직성이다. 이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교육부정(否定)'이다. 더욱이 가르침의 대상은 학생들이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들의 역할모델이 된다. 역할 모델이 바르지 않으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은가. 학력을 위조한 교수가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하고 사회적 신뢰관계를 말할 수 있겠는가.

둘째, 최종 학위문제다. 교수들에게 최종학위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흔히 말하는 학력, 학벌과는 다르다. 예컨대 이란 것이다.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은 학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운동능력이 뛰어나면 그만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만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학력을 보지 않는다. 그들의 기량을 보고 환호하며 예술성을 보고 감동

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주는 증명이다. 즉, 박사학위는 교수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대학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혹자들은 우리사회의 학벌승배가 문제라고 한다. 일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학벌주의 때문에 이들이 가까워질 수 내세우게 되었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들이 적어도 교수사회에서 통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배고픈 남의 집 담을 넘어도 된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

담을 넘는 것은 범죄다. 합리화되기 어렵다. 특히 교수들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양심적 보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근 학력위조 파동 이후 일부 지방대학 교수들이 스스로 교단을 떠나고 있다.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공개적인 망신을 면하기 위해서다. 그런가 하면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교육평론가·문학박사>

안전띠 매지 않은 채 앞자리 아이 안고 운행 '아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조수석에 어린이를 안고 타거나 심지어 운전자가 어린이를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안전 의자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비싼 돈을 주고 안전 의자를 장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람들도 많다.

이같은 행위는 고속도로에 자녀들을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운전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 알면서도 막연히 관망했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이다. 사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아이가 보편적이고, 잠을 재우는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소중한 아이라면 차를 잠시 멈춰다가 가는 일이 있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 여부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책임한 운전자들을 적발하고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도 경찰이 할 일이다.

▲김태민·광주시 북구임동

은펜칼럼

백강화



이명박의 대운하 공약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여 그를 한나라 대표주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사실 그 운하공약은 누가 보아도 고개를 가우뚱거리 만한 엉뚱한 공약(空約)처럼 보인다. 그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어찌면 그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미지뿐일 수 있다. 거기에 '현대건설'의 신화가 지 맞물려서 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우리 국민들은 습관처럼 이슈가 있는 정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록 공상일지언정 없는 것보다는 알맹이 없는 무어라도 있는 것을 훨씬

주장 같은 것들에 명운을 건다. 광주광역시 또한 대규모 도심외곽개발로 인해 취약한 녹지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외국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체험을 들리던 커다란 도심 한 가운데 몇 백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가 즐비한 공원 산책이다. 반면 우리 도시들은 제대로 된 공원은커녕 도대체 특색 없는 아파트만 즐비한 그야말로 암울한 회색도시일 뿐이다. 한 여름에 야외에 나갔다 도심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그 숨 막히는 열기 바로 우리 도시의 열섬현상이다. 도로를 넓히면 차가 그 만큼 다시 늘

환경을 생각하는 공약을 바라며

흥미 있어 한다. 정치에서 그 점을 백분 활용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이슈 공약들은 이명박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권이던 써 먹던 주오 정치적인 전략이었다. 예전에는 전쟁으로 대처했지만 근래에는 5공의 3S 정책 같은 좀 더 온건한 형태로 발전되고 그 효과 또한 지속적이다.

이 지역 정치가들 역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 중인 '여수 엑스포'나, 남해안 개발정책 같은 것들이 정치가들의 말초적인 구미를 자극하면서 정권을 이어가게 하는 기초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약들의 특징은 대부분 반 환경적이라는 것이다. 거의 모두가 환경과, 개발지상주의를 지향한다. 엑스포를 하려면 바다를 메꾸고, 도로를 넓혀야 한다. 푸른 전답을 모두로 바꿀고 있는 전남도 역시 골짜기유치나 자동차 경

어나 버리고,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이러니한 도시의 현상이다. 자동차를 제한하고 주택건설을 규제하면 불면보다 오히려 살기 좋아 지는 것 역시 도시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막고 도시의 전통성을 지켜내는 보존 정책으로 이미 돌아선지 오래다. 그 모습을 구경하려 때론 주고 가면서 왜 우리 그런 흉내내지 못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21세기 지구촌 테마는 단연 환경보존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은 여전히 개발, 개발 만을 외치고 있다. 그 개발 역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면 모르겠는데 엄청난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괴물 같은 개발정책이 아니라,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파괴적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초등학생을 우리 집 아이도 아는 걸 그들은 왜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주부·2005년 12월 수성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의사들 '돈버는 과'로만 몰려... 의료체계 손질 시급

법적으로 의사 면허자는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하니 총괄한다.

외과 전문의가 감기와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거나 산부인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벼운 질환이야 기본 지식이 통하겠지만 자칫 병을 키우거나 치명적인 의료 사고를 부를 가능성이 적잖다. 몇 차례 연수를 통해 전공과목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수년간의 전문의 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의사들은 소위 돈 안되고 위험하다는 이

유료 응급의학과와 외과, 마취과는 다들 피한다고 한다. 통계적으로도 응급의학과와 마취과 전문의는 2010년이면 수요의 50%에도 못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인기 과목인 성형외과와 안과 등은 과포화 상태라 이게 어디 제대로 된 의료 체계인가. 그런 저편에서는 정작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이병원 저병원 쫓아다니다가 목숨을 잃는 응급환자가 생길 것이다. 정부와 병원측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아닌가.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光州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